

바이마르共和國 社會經濟史 研究序說

梁 東 然

이 글은 70년대말 이후 부각된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연구성과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새로이 모색해야 할 방향을 시사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973년 보쿰 심포지움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한 연구성과들을 망라하고 있는 이 글은 첫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의 긴장이 초래한 바이마르정치체제의 중요한 약점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되는 농업진영, 노동조합, 기업측 등의 이해관계와 그 정책적 반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더욱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새로운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최근의 연구들을 주요 논점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상대적 안정기'로 인식되어 온 20년대 독일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대공황기 브뤼닝내각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위기 이전의 위기' 논의와 보카르트논쟁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다.

독일 역사에서 바이마르공화국(1918/19-1933)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된 시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축적된 문헌은 주로 정치사, 정당, 국가제도, 정치적 위기의 진행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경제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정당연구,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위기연구 등에 몰두하는 분위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사 연구경향의 단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독일에도 브렌타노(Lujo Brentano)나 베버(Max Weber)의 전통이 있어서 이로부터 사회학과 정치학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성과를 원용, 사회경제사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바이마르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국가사회주의(나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러한 연구전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즉 역사서술에서 사회과학의 방향제시를 수용하는 일이 중단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경제사라는 주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서를 제공한 것은 서방세계, 특히 미국의 역사가들이었다. 그 후 60년대를 지나면서 바이마르의 경제사 및 사회사적 문제를 연구하는 독일역사가들이 증가하였다. 이글은 70년대 말 이후 부각된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경제사적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이 모색해야 할 방향을 시사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 보쿰 심포지움과 그 以後: 農業問題와 勞使關係

1973년 6월에 보쿰에서 열린 “바이마르공화국의 産業體制 및 政治發展”이라는 심포지움에서는 역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모여 그때까지 진행된 사회경제사적 연구에 관한 잠정적인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문서기록이 잘 보존된 정치적 사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맥락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심포지움을 통하여 바이마르공화국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새로운 쟁점들이 지적되었고 상당한 시각의 변화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발표요지(Mommsen *et al.*(1977))에는 수많은 발표와 분과토론에서 제기되었던 논의가 담겨있으며 참가자들의 논평도 요약,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 경제구조의 변화, 산업체제의 변모,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갈등, 재정정책과 그 사회적 효과, 국제적 상황과 복구정책의 역할, 경제적 이익집단의 세력행사, 다시 말하여 기업층의 이해대변, 농업종사자 및 중간층의 이해관계 등, 또한 불경기때의 국가간섭과 국가의 조정정책 특히 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양상들이 주제가 되었고, 세부 사항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체제가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그 약점이란 국가가 지속적으로 사회정책적 간섭을 하는 한편 대기업에게는 가격형성 및 시장정책의 문제에서 거의 무제한의 자율을 허용하였다는 이중성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비교적 서로 연계되지 않은채 시행되고 있었다. 1918/19년의 무장해제단계에서 대규모 기업이익단체들로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보장받는 것이 문제였으며 그 중 중공업이 선도적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층은 일단 사회정책분야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당, 특히 사민당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였으나 차후에 이러한 양보를 번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정치체제와 기업들간의 의사조정이 매우 “不平等한 業務基盤”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그리고 노조의 지위가 계속해서 약화됨에 따라 경제의 주요부문들이 “합의” 사항을 어기기 시작하였고, “위로부터의 階級鬭爭”이라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의회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초래하였다. 사회정책에서 빚어진 갈등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잠재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1929/30년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등이 보쿰 심포지움에서 뚜렷이

인식되었다.

보름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연구과제목록에 부응하여 다음해부터 연이어 보강된 단행본들이 출간되었다. 예를 들어 농업이익단체와 이들이 정당, 관료,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행사하였던 영향에 관해 Schumacher(1979), Gessner(1976) 등의 연구가 돋보인다. 슈마커는 1918년 이후 농업블록은, 농업과 공업의 “이중전선”(Doppelfront)이 눈에 띄게 느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식되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독일의 혁명이전 구조의 안정화와 공고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농업진영의 단결상태와 협상능력은 1918/19년 혁명의 몇 달 동안 그리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었고 농업단체와 정당들간의 업무관계의 기반은 혁명과 공화국 시기 전반에 걸쳐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별 중요성이 없는 소규모의 몇몇 농민단체를 예외로 하면, 帝國農業聯盟(Reichslandbund)에 집결한 농업단체들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반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우파보수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스너는 공화국말기의 농업블록과 농업이익보호정책을 분석하여, 보수적인 개별농업그룹 가운데 일부는 실용주의적 조건으로 바이마르국가에 협력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그는 “하나의 保守의 行政主義의 趨勢”라는 맥락에서 보수정책의 스펙트럼을 확장,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농업단체들 내부의 대부분의 보수적 행정주의자들 역시 의회주의적 공화국을 긍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1927/28년의 독일농업위기가 시작된 이후 정부 및 정부기구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고 농업보호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려고 더욱 노력하였다. 브뤼닝시기동안 그들은 권위주의국가로 하여금 농업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노선을 강력히 추구하였으며 그 성과가 없지도 않았다.

농업대표단체, 특히 가장 대규모이자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국농업연맹과 그 연맹산하단체들에 관한 전반적인 서술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그들의 경쟁자인 獨逸農民團體同盟(Vereinigung der deutschen Bauernvereine)에 대한 설명이나 오히려 도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獨逸農民聯盟(Deutscher Bauernbund, 1927년부터는 Deutscher Bauernschaft)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통화가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이래로 지역에 따라 그토록 격차가 심한 독일농업경제의 이해관계상황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연구도 아쉬운 실정이다. Becker(1990)가 “1923-29년 간 바이마르공화국이 시행한 농업정책의 효력이 발휘될 여지”에 관해 쓴 교과서적인 개관도, 사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방식으로 쓴 Theine(1991)의 베스트팔렌 농업경제에 관한

신뢰감있는 연구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독일농업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에 다시 예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더욱 선명한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1924년에 발생하여 다음 해까지 확산된 농민들의 집단저항운동에 대해서도 더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ergmann and Megerle(1989) 참조)

보급 심포지움이 있는 이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익단체 및 이익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특히 1918-33년간 노조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그 본질적 양상이 철저히 다루어졌다. 이는 자유주의 노조들과 기독교노조의 조직화 진전 및 노동조합정책, 의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조건에 노동조합운동을 적응시켜 나가는 어려운 과정, 노동조합정책의 시행영역 및 우선순위결정, 자본과 노동의 대립·갈등의 소지 및 그 경과 등 광범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Schönhoven(1987)의 탁월한 개관을 참조].

기업이해의 대변과 기업가정책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중공업에 맞추어져 있다. Weisbrod(1978)의 설명대로 바이마르기 철강공업의 힘은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는地位”(Veto-Position)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대한 취약점도 있었을 뿐더러 개별적으로는 정책을 관철시킬 능력도 거의 없었던 중공업기업들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덕분에 정치체제에 여러 가지 “制約條件”을 부과할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부과된 제약조건들은 정치체제의 통합력과 징세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정치체제의 사회정책적 내용 및 민주주의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중공업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은 일련의 탄탄한 연구들을 통하여 바이마르공화국 전체시기에 대해 계속 구명되었다(예를 들어 Feldman(1977), Plumpe(1990), Turner(1985)). 이에 반하여 대규모 상급경제단체, 즉 제국산업연합, 독일노동자단체연합, 독일상공회의소, 랑남聯合(Langnam-Verein) 등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또한 중공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분야의 활동과 이해관계의 맞물림, 작동방식 등에 관해서도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수출지향의 공업단체들과 내수시장지향의 공업단체들간의 긴장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마르시기의 사회정책을 둘러싼 투쟁들의 경과, 주요쟁점, 전략 등에 관한 연구도 지난 십여년간 큰 진전을 보였다. 특히 노사양측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즉 1918/19년의 중앙노동협회와 1928년의 루르철강투쟁을 조직하는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뒤얽힌 것이었음이 상세히 분석되었다.

기업가와 노조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아직 제국이 붕괴되기 이전인

1918년 가을에 사회적으로 서로 동반자관계를 인식, 상호협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의 활동이유와 목표설정이 판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工業部門의 指導的 人士들(Industrieführer)과 노조간부들은 전쟁이 종식되면 독일경제를 국가관료, 제국의회 등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혁명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의기투합하였던 것이다[Feldman and Steinisch(1985)]. 1918년 11월 중앙노동자협회의 설립은, 노조가 사회적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소폭의 진전을 가져올 사회정책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른 한편 대기업은 사회주의적 요구를 분쇄하고 자신들의 기존의 입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회정책면에서 노동자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간부들의 개혁지향적 낙관주의와 사용자들의 현실정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업가와 노조간의 勞動協議會(Arbeitsgemeinschaft)는 통합능력을 급격히 상실하였고, 결국 1924년 초에 이르러 붕괴하였다[Schönhoven(1987)]. 경기상승국면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중공업은 “11월의 양보”를 위배하여 노조의 “8시간 노동운동” 등에 조직적으로 대항하였고 정치집단들로 하여금 공화국을 권위주의적인 체도로 끌고가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1928년의 루르철강투쟁이 바이마르시대의 사회정책적 협상에 있어 전환점이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루르지방 철강투쟁에서 23만명의 노동자에게 공장폐쇄를 안겨줌으로써 중공업은 바이마르헌법의 사회주의적 요소에 공세를 취하였다. 루르지방 기업가들의 의도는 노조를 계속 약화시키고 국가의 강제분쟁조정체계를 분쇄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입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중공업대표자들은 노조와의 타협노선을 지지했던 제국산업연합, 독일사용자단체연합 등과 차후로는 대립적 위치에 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와 같이 루르철강투쟁에 대한 연구는 대공황 시작 이전에 어떠한 잠재적 갈등요소가 축적되어 있었는가,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로 이미 동요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Weisbrod(1978)].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解析

1914년에 시작되어 거의 10년간 지속된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경제사 및 사회사 방면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1976년 한 모임에서 펠트만(G.D. Feldman)은 그때까지의 연구상황을 “오아시스가 거의 없는 역사서술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과도 같다”고 묘사한 바 있으나[Büsch and Feldman(1978)] 그로부터 13년 후 펠트

만이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황무지”로 규정하였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Feldman, Holtfrerich, Ritter and Witt(1989)]. 80년대에 행해진 바이마르공화국 사회경제사 연구의 중심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과 경과, 파급효과 등이었던 것이다. 논의의 초점이 된 복합적인 주제들 가운데 강조할 만한 네 가지 사항을 살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歷史的 過程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전쟁시작 직후인 1914년에 수많은 국면을, 즉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안정적이었던 국면과 통화가치하락이 가속화된 국면을 두루 거쳐 결국 1922년말에 시작된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 절정국면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인플레이션과정의 최종국면을 가리키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왔다. 인플레이션이 결정적으로 견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정부의 지출이 국채판매로부터 얻어진 수입을 초과하였던 1916년이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1922년말의 몇 달 동안, 즉 루르지역이 점령되어 수동적 저항이 시작되기 이전인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통화가치하락의 혼란스런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이제 1차대전 이래의 여러 사건들의 전체적인 진전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의 역사서술은 전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몇 달 동안에 집중하였지만 새로운 연구경향에서 이는 더 이상 독일 인플레이션의 가장 흥미로운 기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것이 인플레이션의 전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지표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흔히 인플레이션은 최상층부의 정치가들이 경제정책을 잘못 쓴 결과로 이해되어왔다. 이에 반하여 요즈음 들어 특히 경제사가들 사이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肯定的 視角이 공유되고 있으며 적어도 하이퍼인플레이션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홀트프레리히의 연구로서, 불안한 전후의 몇 해 동안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윤활제”(Schmiermittel)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Holtfrerich(1980)].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의 결과로 생긴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1922년 말까지 그다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전략은 독일로 하여금 1920-1921년의 “世界經濟의 危機”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1921년에 영국에서 실업률이 20% 이상에 달했던 반면,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완전고용의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경기진작책이 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제성장에 필요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경제사가들에 따

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독일경제가 당시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타의 나라들이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도 지적할 만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홀트프레리히는 1922년까지의 통화팽창정책이 독일경제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경제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주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를 매우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한다. 즉 1922년 여름까지 단기외자의 도입, 특히 미국에서 유출된 자본의 상당액수가 독일에 투자되었고 이 과정에서 화폐가치하락으로 인해 생긴 채권자의 손실의 일부는 외국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또한 Schuker(1988) 참조]. 결국 인플레이션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문제삼을 만했지만,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얼마간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야말로 독일에 대한 승전국의 전후배상요구를 가장 먼저 감당해 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홀트프레리히와 몇몇 경제사가들에 의하면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국내의 정치적 강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1918년 이후에 독일이 인플레이션전략 대신 안정화정책을 썼더라면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로 인해 1923년 이전에 이미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인 행정체제는 좌초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제시로 인해 1919-1923년의 독일의 통화 및 배상금정책에 대해 그간 받아들여져 왔던 통념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대상으로 남는다. 즉 인플레이션과정을 판단할 때, 1922년 말까지의 통상적인 인플레이션의 진전과,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사회심리적, 정치적 관련을 지닌 하이퍼인플레이션과의 차이가 이처럼 분명히 식별될 수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요즈음 새로이 작성되는 독일 인플레이션의 비용-편익추계에서는 1922년에 이미 비용이 이득을 능가하게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폰 크루드너(von Kruedener, in Feldman, Holtfrerich, Ritter and Witt(1989))에 의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는 너무 커서 인플레이션의 진행이 1922년 중엽까지 달성한 정치적 효과를 상쇄시킬 정도였다. 광란의 1923년, 그 주관적 체험은 장차 독일의 제반경제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여지를 오랫동안 제한하는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1923년에 독일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입장, 즉 인플레이션이 전시 경제에서 평화시 경제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었으며, 지칠대로 지친 대중을

노동과정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란이 발생할 위험을 억누르고,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비로소 소생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누가 얼마나 숙명적으로 치렀는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존의 주장에서는 인플레이션진행이 개별 대기업가(예를 들어 *Stinnes*)나 사회의 특정집단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가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미리 계획된 조작이라는 논제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중공업 기업가처럼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서 점차 인플레이션을 道具化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태도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그들은 매우 다양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 태도가 항상 일관된 것도 아니었다[Feldman, Holtfrerich, Ritter and Witt(1982)].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양한 학습 및 적응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1922년 말 독일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실제로 금화나 외국돈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마르크화의 통용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국내가격들은 세계시장수준까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될 자극이 제거된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독일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학습 과정에 의존한다. 여기서 시간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여 언제, 누가, 누구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의 파급효과와 기회를 경험했는가 정확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Feldman, Holtfrerich, Ritter and Witt(1986)].

넷째, 인플레이션의 受惠者와 被害者에 관한 문제도 최근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종래의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편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사회적 결과와 그로 인해 상처입은 경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사회주의(나찌)운동의 부상과 히틀러의 승리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 연관이 존재한다. 직접적 연관이란 인플레이션이 중산층의 대부분을 프롤레타리아화 해버렸고 여기에 정치적 이념의 부족이 가세하여 나찌에 쉽게 감염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며, 간접적 관련이란 세계대공황 기간중 독일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업을 줄이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다[Borchardt(1982)].

인플레이션이 여러 사회계층의 所得과 資産狀況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통계자료들이 불완전하고 공식통계들의 경우 방법론상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위조되는 경우마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들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충분히 활용하면, 예를 들어 함부르크나 튀링겐같은 개별지역에 대해 직업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임금계열 등에 대한 적절한 추계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동시대인의 기록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진행에 따른 사회적 결과에 관한 뚜렷한 모습을 재구성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오늘날 경제사 및 사회사가들은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몰락해버렸다는 기존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中産層”은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다양한 그룹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감지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를 거의 없애버렸고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였다. 저축보유자, 저당채권자, 공채소지인 등이 자산을 상실하고 이자소득자층이 완전히 사라진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공업자 등은 인플레이션하에서 거의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사업을 잘 꾸려나갔다. 또한 농업도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지녔던 사회적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다[Büsch and Feldman(1978)].

물론 독일 중산층내에서 부의 재분배과정이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요소로서의 독일 “부르조아층”의 해체를 촉진했고 부르조아당내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은 현저하게 첨예해져서 독일정당체제의 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임금과 봉급생활자들의 實質所得推移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중이다. 노동자층의 빈곤화가 전쟁 시작 이후에 시작되어 1919-1923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견해가 최근까지도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Holtfrerich(1980)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아벨스하우저[Abelshäuser in Mommsen and Schulze(1981)]에 의해서 의문시되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기간 중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인구의 생활수준이 중요한 영역에서 측정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일 8시간 노동의 도입, 인플레이션 붐으로 인한 상대적 완전고용, 식료품 및 주택임대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등으로 노동자층은 득을 보았다. 나아가 임금협상체계에서 임금을 통화가치저하에 적응시키도록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속에서도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대중이 처한 열악한 물질적 생활에 대한 종래의 모습이 교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충족되자 노동자층은 전쟁으로 소진된 부분에서 단지 심리적인 회복만을 얻었을 뿐 전쟁전의 생활수준은 결코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Steinisch(1986), Niehuss(1985)].

공무원 봉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1920년 3월의 바닥권 이후에 20년대 초기의 인플레이션 진전이 진폭의 확대를 거

쳐 실질소득의 일시적인 회복을 가져왔다고 한다. 물론 이미 1914년 이전에 봉급생활자집단 내에서 소득규모가 서로 접근하던 중요한 경향이 전쟁 및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당히 강화되어서 공무원층내에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촉진되었으며 봉급생활자 그룹들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좁혀지자 고급공무원층은 이를 사회적 지위의 격하로 자각하였다 [Kunz(1986)]. 所得水準의 平準化傾向은 공무원봉급체계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기에 청소년층과 성인층, 여성과 남성,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감소하였음이 관찰된다. 인플레이션의 분배효과에 관한 논의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인플레이션기의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 걸친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한 것으로는 Feldman(1993)이 돋보인다.

3. “相對的 安定期”의 再評價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의 경기와 경제의 전반적 추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우세하던 견해는 이 시기동안 독일에서 상당한 경기상승이 있었는데 대공황시작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공황에 의해서 급격히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카르트는 “30년대 초 대공황기의 不可避한 狀況과 政策의 餘地”라는 글을 통하여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Borchardt(1982)]. 이는 브뤼닝정권의 긴축정책을 비판하는 논지를 반박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이러한 수정적 견해는 그 이후 1925-1929년 사이의 독일의 경기변동 및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관해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는 많은 연구를 촉진하였다.

보카르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1차대전 이후에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상으로 재정을 꾸려 나갔다. 정부는 예전의 어떤 독일정부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보조금 및 부를 再分配하는 體系를 갖추었다. 특히 1925-1929년의 임금상승은 생산성향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직접 재분배의 기체로서만 효력을 발휘했을 뿐이었다. 1923년에 인플레이션이 종결된 이후 더 이상 가격상승으로 상쇄할 수 없었던 임금상승은 노조의 강화된 입지를 근거로 하여 국가의 강제적 조정에 도움받아 실현되었던 것으로, 그 결과 각종 소득에 압박을 가하여 이로부터 통상적인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투자율은 낮은 상태에 머물렀고 독일의 경제성장은 1929년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다시 말해 전시 및 전후 시기에 이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기대에 못미치는 “相對的 停滯”를 초래하였다. 실업률은 이미 1925년 무렵부

터 전례없는 정도로 높아졌던 것이며 1929년 이후에 가서 비로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경기하락이 개별 경제부문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1929년 10월의 뉴욕 추가폭락 훨씬 이전에 엄습하였다. 요컨대 보카르트가 확인한 바와 같이 1925-1929년의 독일경제를 “非正常的이며 확실히 ‘병든’ 경제”로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경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경제사가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로부터 관심과 동의를 얻었으나 즉각적인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바이마르시기에 총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실제로 과도하게 높아진 임금 때문에 낮게 머물렀는가 아니면 다른 생산성저해요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국민경제적으로 잘못 처리된 보조금, 혹은 장기적으로 신축적인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부담이 되었던 독일공업의 카르텔화같은 요인들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않았는가(Winkler(1982)). “分配中立的 賃金配分”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노동자층의 임금을 그때그때 경제의 생산성향상에 따라서만 측정한다는 것은 전간기 독일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경제성장의 전망에 의해서만,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로서만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정치적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A. Kunz in Feldman, Holtfrerich, Ritter and Witt (1982)].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라는 보카르트 논제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홀트프레리히에 의해 제기되었다(Holtfrerich(1984)). 상세한 계산을 근거로 한 그의 두 가지 주요 논점은 첫째, 임금의 추이는 생산성추이로 인해 그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1929년 이전의 독일경제에서 두드러졌던 투자감소의 원인과 1924-1929년간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의 원인은 노동시장 이외의 다른 부분, 특히 높은 이자율수준과 대외무역장벽 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식적인 제국통계에서 “임금과 봉급” 부문이 1925년부터 차지하는 몫이 1914년 이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높았다면(1913년에 국민소득의 45.3%, 1925년부터 55%), 이것은 너무 높은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봉급생활자(사무직근로자와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보다 나은 소득을 누리고 있었다. 통계조사의 결함 및 제국통계에서 국민소득을 분류하는 작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방식을 원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Potthoff(1987), Winkler(1985)).

보카르트의 주장대로 1924년 이후의 몇 해 동안 경제적 합리성이 유독 기업가들에게만 있었으며 임금압력이 경제 및 사회발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서 그렇게 뚜렷하게 작용

했는지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집중적으로 진행중이다(von Kruedener(1990), Buccheim *et al.*(1994)). 논쟁의 결론은 아직 잠정적이지만 입장의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시각상의 접근도 요원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사이에 한 가지 합의는 존재하는데, 비록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독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대공황시작 이전에 이미 매우 不安定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공황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다는 데는 독일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경기하강이 1929년 말에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 하강세는 뉴욕의 주가폭락에 의해 강화되었고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危機 以前の 危機”가 언급될 수 있다. 1924-1929년의 경기 및 경제발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정당체제의 해체에 관해 축적된 연구나 노동시장에서의 날카로운 대결에 관한 해석들과 연관지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점차 바이마르공화국의 극히 짧았던 “좋았던” 몇 년간에도, 즉 소위 상대적 안정화의 몇 년 동안에도 정치체제, 경제적 상태, 사회적 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안정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4. 브뤼닝內閣의 經濟政策

브뤼닝시대(1930-1932)가 바이마르공화국 붕괴의 최초단계인가 혹은 민주주의를 구출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50년대 이래로 브뤼닝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학자나 사학자를 막론하고 퇴임때까지 시종일관했던 브뤼닝의 緊縮政策은 위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뤼닝내각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1979년에 보카르트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브뤼닝정부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Borchardt(1982)).

보카르트의 문제제기가 말해 주듯이 왜 이미 브뤼닝정부에서 모종의 경기순환에 대처하는 팽창적 경기정책이 취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관리층의 통찰과 능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1930-1932년의 정치 및 경제부문의 정책시행 가능성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브뤼닝이 다른 대안을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보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위기에 대처하는 조정정책이 “언제” 시행되었어야 했는가. 둘째 “적절한” 수단이 취해졌는가. 보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경기정책전략의 변경, 즉 국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이행한 것은 빨라도

1931년 여름에나 시행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경기후퇴에 대한 “適時의” 대응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1932년 여름에 도달한 위기의 최저점이 몇 달 정도 당겨질 수 있을 뿐이었다. 보카르트는 브뤼닝정부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서 적자재정을 고려하기 어려웠던 이유로서 정부쪽에서 볼 때 해외신용이 정치적 부담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제국은행의 관할을 벗어난 통화증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정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동장치, 예를 들어 제국은행법규상의 규정들, 영플랜에 의해 마르크화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등의 장애요인들을 서로 대립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즉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정책운용의 여지는 대외 및 국내정치가 처한 제약조건에 의해 협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브뤼닝의 통치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점에서 경기이론적으로만 상황을 파악하려는 비판들이 몰역사적일 수 있는 것이다. 대공황시작 이전에 이미 “비정상적이며 확실히 병든” 상태였다고 하는 독일경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보카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하고 있다. 즉 때 이른 안정화정책은 “병든” 경제를 보존할 따름이므로 그와 같은 종류의 경기정책은 위기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브뤼닝은 우리가 오늘날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 대처방안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사후적으로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당시로서는 독일의 정책책임자들이 추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확고한 학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온 많은 것들이 보카르트의 연구에서 의문시되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커다란 주목과 함께 반박도 받았으며 보카르트의 시각과 논의에 관한 평가를 둘러싸고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Holtfreich(1982)가 대표적인데 그는 1929년 이전의 임금인상이 과도했다는 보카르트의 논제를 단호하게 기각할 뿐 아니라 브뤼닝이 경제 및 재정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強制狀況”에 처해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한다. 홀트프레리히는 바로 브뤼닝측에서 1931년 7월의 은행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정책을 수정하려는 쪽으로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왜 브뤼닝이 국내정책상의 모순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디플레이션진행을 고수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브뤼닝과 그 추종세력이 추구하였던 정치적 목표가 국내정치적으로는 정부재정의 건실화,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지출의 삭감, 대외정책적으로는 전쟁배

상금의 삭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브뤼닝이 이 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시행범위를 제한시켰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독선적인 정책우선순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곧, 첫째 베르사이유조약의 수정, 특히 연합국의 동의를 얻어 전쟁배상금을 삭감하는 일, 둘째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않기 위하여 되도록 철저히 국제적 의무를 엄수하는 일, 예를 들어 영 플랜에서 독일의 통화를 금 및 외환보증에 강력히 묶어놓는 것, 셋째 인플레이션의 회피, 그리고 완전고용이나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에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기안정화정책을 아직 전쟁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탕감되기 이전인 1931년 여름에 이미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 고용창출정책을 1년쯤 일찍 도입하였더라면 독일의 정치적 운명을 다른 궤도로, 즉 민주주의를 살아남게 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홀트프레리히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안이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란 분명히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Büttner(1989)에서도 나타난다. 늦어도 1931년 여름 이후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적, 이론적 조건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바램도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즉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가들이 사후적으로 브뤼닝의 정책을 반박하고자 내놓은 모든 이의제기들이 사실은 이미 同時代人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Meister(1991) 참조).

홀트프레리히, 뷔트너, 그밖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진 브뤼닝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보카르트는 자신의 해석을 견지한다(von Kruedener(ed.)(1990, 마지막장) 참조). 브뤼닝에게 戰爭賠償金의 蕩滅이 실제로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것은 그동안 더이상 의심받지 않아왔다. 브뤼닝이 즉위 이후 줄곧 전쟁배상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제는 방대한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광범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意圖의으로”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배상문제해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브뤼닝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설은 상당수 있다. 국민의 여타 모든 생사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고 무리하게 전쟁배상해결정책을 최우선목표로 삼은 것은, 브뤼닝이 배상금 탕감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政治的正當性을 가지고 장래의 협력을 위한 길을 틀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힌덴부르크대통령의 소망과 제국수호의 길잡이에 상응할 수 있으리라는 의도로 정책을 수행한 때문이었

다. 그러한 전쟁배상금탕감, 완고하게 지속되는 긴축정책, 대통령특별조치체제를 고수한다는 목표사이에 일정한 연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은 브뤼닝의 실각과 함께 내각제에 대한 혐오 및 독일경제 및 재정정책의 형성에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대공황시기에 명백히 조성되었음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히틀러의 출현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1930년 9월과 1933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과 그 경과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부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연구문헌에서 근거가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매우 상세히 다루어졌으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평가될 가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개별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브뤼닝이 몰락할 때 그 동기, 단계, 책임소재 따위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Schulz(1992) 참조). 혹은 브뤼닝내각에 대립하는 사회민주당의 관용정책 또는 관용주의적 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보다는 새롭고 신중한 권력배치상황을 고려하는 시각이 통용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나 노조지도부의 동기부여, 목표설정의 명확성(나찌정부의 집권을 저지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 현실적인 그리고 책임있는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Winkler(ed.)(1992)].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같이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지엽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는 은행공황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직접적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5

팩시: (02)888-4454

參 考 文 獻

- Balderston, T. (1993): *The Origins and Course of the German Economic Crisis, 1923-1932*, Berlin.
- Becker, H. (1990): *Handlungsspielräume der Agrarpolitik in der Weimarer Republik zwischen 1923 und 1929*, Stuttgart.
- Bergmann, J., and K. Megerle (1989): "Protest und Aufruhr der Landwirtschaft in der

- Weimarer Republik (1924-1933). Formen und Typen der politischen Agrarbewegung im regionalen Vergleich,” in J. Bergmann *et al.* (ed.), *Regionen im historischen Vergleich, Studien zu Deutschland im 19. und 20. Jahrhundert*, Opladen, 200-287.
- Borchardt, K. (1982): *Wachstum, Krisen, Handlungsspielräume der Wirtschaftspolitik*, Göttingen.
- Buchheim, C., M. Hutter, and H. James (eds.)(1994): *Zerrissene Zwischenkriegszeit: Wirtschaftshistorische Beiträge*, Baden-Baden.
- Büsch, O., and G.D. Feldman (eds.)(1978): *Historische Prozesse der deutschen Inflation 1914-1924*, Berlin.
- Büttner, U. (1989): “Politische Alternativen zum Brüning’schen Deflationskurs: Ein Beitrag zur Diskussion über ‘ökonomische Zwangslagen’ in der Endphase von Weimar,”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7.
- Feldman, G.D. (1977): *Iron and Steel in the German Inflation 1916-1923*, Princeton, N.J.
- _____(1993): *The Great Disorder,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in the German Inflation, 1914-1924*, Oxford.
- Feldman, G.D., and I. Steinisch (1985): *Industrie und Gewerkschaften 1918-1924, Die überforderte Zentralarbeitsgemeinschaft*, Stuttgart.
- Feldman, G.D., C.L. Holtfrerich, G.A. Ritter and P.C. Witt (eds.)(1982): *Die deutsche Inflation*, Berlin/New York.
- _____(1986): *Die Anpassung an die Inflation*, Berlin/New York.
- _____(1989): *Konsequenzen der Inflation*, Berlin.
- Führer, K.C. (1990): *Arbeitslosigkeit und die Entstehung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utschland 1902-1927*, Berlin.
- Gessner, D. (1976): *Agrarverbände in der Weimarer Republik*, Düsseldorf.
- Holtfrerich, C.L. (1980): *Die deutsche Inflation 1914-1923*, Berlin.
- _____(1982): “Alternativen zu Brüning’s Wirtschaftspolitik in der Weltwirtschaftskrise?” *Historische Zeitschrift*, 235.
- _____(1984): “Zu hohe Löhne in der Weimarer Republik?”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
- James, H. (1986): *The German Slump: Politics and Economics, 1924-1936*, Oxford.
- Kunz, A. (1986): *Civil Servants and the Politics of Inflation in Germany 1914-1924*, Berlin.

- Meister, R. (1991): *Die große Depression: Zwangslagen und Handlungsspielräume der Wirtschafts- und Finanzpolitik in Deutschland 1929-1932*, Regensburg.
- Mommsen, H., D. Petzina, and B. Weisbrod (eds.)(1977): *Industrielles System und Politische Entwicklung in der Weimarer Republik*, Düsseldorf 1974, 2 Bde., Kronberg i. T./Düsseldorf.
- Mommsen, H., and W. Schulze (eds.)(1981): *Vom Elend der Handarbeit*, Stuttgart.
- Niehuss, M. (1985): *Arbeiterschaft in Krieg und Inflation, Soziale Schichtung und Lage der Arbeiter in Augsburg und Linz 1910 bis 1925*, Berlin/New York.
- Plumpe, G. (1990): *Die I.G. Farbenindustrie, A.G. Wirtschaft, Technik und Politik 1904-1945*, Berlin.
- Potthoff, H. (1987): *Freie Gewerkschaften 1918-1933: Der Allgemeine Deutsche Gewerkschaftsbund in der Weimarer Republik*, Düsseldorf.
- Schönhoven, K. (1987): *Die deutschen Gewerkschaften*, Frankfurt.
- Schuker, S.A. (1988): *American "Reparations" to Germany, 1919-1933*, Princeton.
- Schulz, G. (1992): *Zwischen Demokratie und Diktatur vol.3, Von Brüning zu Hitler: Der Wandel des Politischen Systems in Deutschland 1930-1933*, Berlin.
- Schumacher, M. (1979): *Land und Politik: Eine Untersuchung über politische Parteien und Agrarische Interessen 1914-1923*, Düsseldorf.
- Steinisch, I. (1986): *Arbeitszeitverkürzung und Sozialer Wandel, Der Kampf um die Achtstundenschicht in der deutschen und amerikanischen Eisen und Stahlindustrie 1880-1929*, Berlin/New York,
- Turner, H.A. (1985): *German Big Business and the Rise of Hitler*, Oxford.
- von Kruedener, F.J. (ed.)(1990):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Collapse, The Weimar Republic 1924-1933*, New York/Oxford/München.
- Weisbrod, B. (1978): *Die Schwerindustrie in der Weimarer Republik*, Wuppertal.
- Winkler, H.A. (1982): "Klassenbewegung oder Volkspartei? Zur Programmdiskussion in der Weimarer Sozialdemokratie 1920-1925," *Geschichte und Gesellschaft*, 8.
- _____(1985): *Der Schein der Normalität: Arbeiter und Arbeiterbewegung in der Weimarer Republik 1924 bis 1930*, Berlin.
- Winkler, H.A. (ed.)(1992): *Die deutsche Staatskrise 1930-1933: Handlungsspielräume und Alternativen*, München.